

지방자치 30년, 이번 대선의 과제

의정단상

박수기

광주시의원



지방자치 30년 만에, 성남시장과 경기 도지사로 풀뿌리 지방자치 현장에서 성장한 지도자가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했다. 그는 단순히 자리만 거쳐 온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등 지방자치 현장에서 독창적인 정책을 만들고 적용시켜 성과를 인정받은 정치인이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뤄낼 중요한 시점이다. ‘민주주의 학교’라 불리는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졸업’을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재수강’의 시간을 보내게 될지는 이번 대선에 달렸다.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고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찾은 광주의 한 상가 골목. 한 상인이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당의 심장이 광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광주에 뭘 해줬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실망과 절망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세 번이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갈수록 장사는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서울만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의 절박한 외침은 굳게 닫힌 셔터 너머로 스며드는 어둠처럼, 찌늘하게 지역 경제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었다.

돌아보면, 한국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틀 안에서 끊임없이 제약받아 왔다. 수도권 일극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고,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자율성

은 제대로 꽃피우지 못했다. 1987년 헌법이 민주화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으나, 분권과 자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자치입법권, 자주조직권과 더불어 지방재정권은 여전히 온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다. 지방 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며,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삭감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이는 곧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제약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광주의 현실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며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광주지만, 국비 확보를 위한 지방비 매칭조자 제대로 하지 못해 발목이 잡힌다. 매년 완공 기일이 늦춰지는 지하철 공사 현장 역시 마찬가지다. 부족한 재정 상황에 확보된 국비마저 반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폭 20m 이상의 광주시 관리 도로는 378개 노선, 597km에 달하는데, 포장 덧씌우기 공사의 최소 주기를 10년으로 잡아도 연간 60km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광주시는 매년 20km 정도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도로조차 누더기처럼 땀 흘려놓은 포트홀이 즐비하다. 각종 교량과 상하수도 정비, 싱크홀 예방 등 노후화되는 도시를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시설 예산마저도 때질식이다.

차기 정부에서 지역을 살려 나아가 대한민국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

정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첫째, 개헌을 통한 자주재정권의 확고한 보장이다. 헌법에 지방재정 조정 제도를 명문화하여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스위스와 같이 헌법 차원에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배분이다. 현재 중앙 정부에 편중된 세수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방 정부가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이다.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 상황에 따른 일방적인 삭감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측가능한 재정 운영 환경 조성은 지방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넷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정 운영의 자율성 극대화이다. 획일적인 재정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재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방자치 30년,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튼튼한 지방재정 확립은 그 핵심이며, 헌법 개정, 세수 구조 개혁, 교부세 제도 개선,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라는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통해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광주 골목골목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의 절망적인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社說

벼랑 끝 지역경제 살릴 해결사 필요할 때

지역희생 공허한 구호 안돼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 고용지표가 거듭 악화되며 지역경제가 위태롭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2만 3000명 가까이 줄었다. 광주는 전국에서 고용률 하락폭이 가장 컸고, 전남도 여성 고용률이 급감했다. 상용직은 줄고 임시·일용직은 늘었으며,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감소해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

통계는 냉정하다. 광주의 15·64세 고용률은 1.3%p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청년과 여성의 고용이 특히 감소했다. 전남도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고, 상용근로자는 2만 3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줄며 지역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구조적 위기다. 이렇수록 정치는 응답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은 말 잔치가 아닌 생존 해법이 돼야 한다. 국민의 표심은 고통의 반영

이다.

지역경제를 되살릴 해결사가 누구인지, 이제 후보들이 스스로 증명할 때다. 이재명 후보는 AI·K콘텐츠 중심의 신산업 육성과 상법 개정, 공정 거래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상속세 인하, 산업 전기료 감면, AI 인재 양성고 펀드 조성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처 개편과 리쇼어링(기업 국내 복귀), 법인세 자치권 확대 등 지역 경제 자율성 확보를 강조했다. 모두가 ‘경제’를 1호 공약으로 내건 것은 민심의 절박함을 반영한다. 하지만 공약은 내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경제는 더 이상 실험 대상이 아니다.

이젠 지역 현실을 국가의 과제로 삼고 실행할 준비가 된 후보가 필요하다.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 개혁을 동반해야 하며, 지역이 살아야 나라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된다. 이번 대선만큼은 ‘지역경제 희생’이 공허한 구호가 되어선 안 된다. 정쟁이 아닌 실천의 공약이 절실하다. 벼랑 끝에 선 지역경제를 일으킬 진짜 책임자가 반드시 선택돼야 한다.

GGM 노조 상경투쟁, 정말 공멸 원하는가

신뢰회복 위해 노조 변화해야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의 상경 투쟁에 맞서 ‘상생의 일터 실천협의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대자동차 캐스퍼와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 캐스퍼 일렉트릭을 위탁 생산하는 GGM의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주장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GGM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실천협의의 주장은 단순하다 ‘고객사로부터 생산물량을 수주받아 운영하는 위탁생산회사인 만큼 GGM이 할 일은 생산에 전념해 고객사의 신뢰를 쌓는 것’이라는 것이다. 상경투쟁을 두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사원들은 동조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실천협은 또 “회사출범의 근간인 노사 상생발전협정서 준수라는 대전제하에 실효성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때 우리의 뜻이 더욱 멀리, 깊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GGM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하나된 힘으로 회사를 지켜낼 것이라는 게 실천협의의 설명이다.

현재 GGM의 총 직원은 680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노조원은 220여 명으로, 3분 2 이상의 직원들이 노조의 상경투쟁에 우려감을 보인다고 한다. 노사 대립에 따른 GGM의 미래도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다. 노조측은 이번 상경투쟁과 함께 교섭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을 경우 전 조합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조합원의 부분파업이 전체파업으로 확대되면 모처럼 청신호가 켜진 캐스퍼 전기차의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질 수 밖에 없다. 공멸로 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 모델의 몰락과 함께 GGM이 존속할 명분과 근거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높다.

노조측 주장처럼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권리는 지켜져야 옳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의 당위성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노조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사회적 합의와 공적 가치는 GGM 설립의 가장 중요한 뿌리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 근로자의 생존을 일부 노조원이 위협한다는 것도 옳지 않다. 노사갈등의 골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되찾기 위한 GGM노조의 변화를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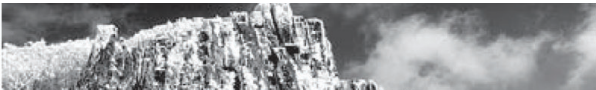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서석대

“모든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한글만큼 ‘떼똥’의 문자표기에 적합한 글자는 없을 것이다.” 지난 2004년 동티모르 독립대 이은택 교수가 동티모르 정부에 ‘떼똥’의 표기를 한글로 하자는 제안을 내놔다. ‘떼똥’은 동티모르의 고유한 언어. 하지만 이를 적을 문자가 없어 동티모르는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었고, 알파벳의 한계로 이를 대신할 글자를 찾고 있었다. 이른바 ‘떼똥-훈민정음 연결 프로젝트’였다. 그 해 동티모르 대통령의 부인 커스티 구스마오씨와 호세 라모스 호르타 외무장관이 한국을 찾기도 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떼똥-훈민정음’ 프로젝트는 한글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말은 있지만 글이 없는 민족에게 ‘문화의 빛’을 안긴 게 거다.” 2009년 8월 7일, 훈민정음학회가 인도네시아 부톤섬 짜아짜아 부족과 한글을 공식 표기 문자로 도입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인구 6만여 명의 소수민족인 이들은 독자적인 언어를 갖고 있었지만 이를 표기할 문자가 없어 고유어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훈민정음학회가 짜아짜아 족을 찾아 한글 채택을 건의했고 인도네시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지금 한글은 짜아짜아 족에게 없어서 안 될 문화가 됐다. “짜아짜아 족이 한글을 통해 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짜아짜아 족을 취재한 뉴욕타임스의 평가다.



한글은 창제 원리의 과학성과 독창성이 뛰어난 ‘꿈의 알파벳’이다.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문자이기도 하다. 실제 한글은 모양이 체계적이고 간단한 데다 배우기 쉽고 어떤 소리든 표기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 표음문자라는 것도 장점이다. 소리를 자음과 모음으로 표기하는 한글은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문자입력 속도가 한자나 일본어보다 최대 10배 가량 빠르다. 문자입력이 정보 검색과 전송 속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한글은 지식 정보화 시대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한글산업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탄신일(15일)에 맞춰 (가칭)한글산업진흥원추진위원회가 광주에 활동을 시작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광주형 AI로 한글을 산업화시켜 광주의 미래를 꿈꾸겠다는 전국 최초의 시도다. 조선대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하나인 글로벌 오픈 캠퍼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중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한국어 AI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추진위의 목표다. 한글산업을 미래 광주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문호 ‘뫼백’은 한글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단순한 글자’라고 했다. 가장 훌륭하고 단순한 한글로 광주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한글산업진흥원의 도전이 반갑다.

이용한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